

10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45.06	↑ 코스닥	681.79
	(+151.36)		(+38.40)
↑ 금리 (미국 9년)	2.437	↓ 환율 (원/달러)	1457.20
	(+0.003)		(-26.90)

USD/KRW
1,457.20
Hana Bank
오락가락 관세에
추가·환율 널뛰기
기업 환 리스크 비상
03

트럼프 '관세 폭격' 中 정조준 숨통 튼 삼성, 발등의 불 애플

美, 中에 125% 보복관세 단행 애플, 아이폰 90% 中서 생산돼 美 출고가 2배인상 가능성 제기
삼성엔 생산지 다변화로 안도 장기적 관세회피 탈중국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우선적으로 중국에만 정조준 되자, 글로벌 전자업계 양대 축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아이폰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은 가격 급등 압박에 직면한 반면, 베트남과 인도의 생산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4%에서 125%로 추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다. 반면 한국, 베트남, 인도 등 56개국은 90일간 관세를 10% 수준으로 낮춰주는 유예 조치를 적용 받았다.

직격탄을 맞은 건 애플이다. 정보기술(IT) 매체 씨넷에 따르면, 아이폰16

프로 맥스(256GB)의 미국 출고가는 기존 1199달러(약 175만원)에서 최대 2698달러(약 394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 16e도 기존 599달러(약 88만원)에서 1348달러(약 197만원)로 두 배 이상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관세가 1대1로 가격에 전가되지는 않겠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애플은 현재 인도 내 생산 비중을 14%까지 끌어올리고 해당 물량을 미국으로 전량 수송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 생산 물량은 중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미국 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백악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애플에게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이 아이폰 생산지를 미국으로 옮길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월가는 아이폰이 미국에서 만들어질 경우 비현실적인 가격대가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아이폰 제작 비용이 90% 늘고 최종 가격은 25% 상승할 수

있다"며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더라도 부품 상당 부분은 여전히 중국산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웨드부시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 가격이 최대 3500달러(약 511만 원)에 이를 수 있다"며 미국 내 생산은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번 관세 유예 조치로 '수혜 기업'으로 떠올랐다. 삼성은 전체 스마트폰 중 약 50%를 베트남에서, 30%를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유예 대상에 포함되면서 당장 미국 수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은 특히 인도 노이다 공장에서 프리미엄 모델인 갤럭시 S 시리즈까지 생산하며 공급망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애플과 삼성 모두 장기적으로는 '탈중국' 가속화가 불가피하다는 데 입을 모은다. 닐 샤카운터포인트리서치 부사장은 "제조업체가 인도 생산 비중을 높이면 단기적인 비용 상승은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성과 관세 회피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따뜻한 봄날을 한번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영상을 공개했다. /뉴스1

이재명, 대선 출마 선언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국민의 훌륭한 도구 될 것"

국정 철학·비전 다뤄형식 영상 공개 K-이니셔티브 새로운 국가비전 제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10일 'K-이니셔티브(Initiative)'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제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나 광화문 등지에서 대면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풀어낸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선보였다. <관련기사 6면>

이 전 대표는 영상에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세상이 진정한 봄날 아니겠나.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그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만들어가는 것이

다.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며 했다.

이 전 대표는 비상계엄 이후 나타난 한국 사회의 극심한 갈등의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로 꼽으며 정부 차원의 대대적 투자를 통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핵심축으로 국정을 운영한 것과 차별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다.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부가 너무 한 군데 몰려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대내외 위기에 유통가 구조조정 칼바람

현대캐, 창립 후 첫 희망퇴직 단행 근속 3년 이상 직원도 대상자 포함 롯데웰푸드도 45세 이상 희망퇴직

대내외 위기 속 경기 침체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통업계에는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쳤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다수 유통 대기업들이 창립 후 첫 희망퇴직을 단행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면세점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를 대상으로 창립 후 첫 희망퇴직을 진행한다.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위로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근속 3년 이상 직원에게는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포함한 연간 급여 기준 12개월치, 5년 이상 직원은 15개월 치에 해당하는 특별위로금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미사용 연차휴가와 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

또한,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내달



현대면세점 무역센터점 전경. /현대면세점

31일까지 유급 근무 면제 기간을 부여해, 인수인계 및 퇴직 준비 시간을 지원한다.

롯데그룹 소속 회사인 롯데웰푸드도 희망퇴직을 진행한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45세 이상(1980년 이전 출생자) 및 근속 10년 이상 임직원이다.

근속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기준급여 18개월, 15년 이상은 기준급여 24개월치를 지급한다. 이 외에도 재취업 지

원금 1000만원과 대학생 학자금 1명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유통가 희망퇴직의 칼바람은 작년부터 본격화됐다. 특히, 면세업계 경우 지난해 롯데면세점(8월), HDC신라면세점(9월), 신세계면세점(11월)이 잇달아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주목할 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는 유통업계의 희망퇴직 대부분이 '창사 이래 처음'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희망퇴직을 단행한 신세계면세점에 이어, 올해 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현대면세점 역시 창사 이래 처음이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지난해 6월 롯데온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12월에 퇴직 대상 확대해 2차 퇴직 신청을 받았다. 마트업계에서는 이마트가 지난해 3월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12월에 적용 대상을 확대해 추가 희망퇴직 인원을 모집했다. 이들 역시 모두 다 창사 이래 첫 시행한 희망퇴직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한숨 돌린 관세... 對美 협상시간 확보

트럼프, 韓 상호관세 90일 유예 6·3 대선 이후 통상전쟁 본격화

한국산에 대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가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된 지 불과 13시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했다. 오는 7월 상순까지 한국 등 각국의 수출품에 10%의 기본관세만 매긴다는 것이다. 중국만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 세계의 상당 기업·정부가 시간을 벌었다. 정치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 우리나라도 예기치 못한 국면을 맞게 됐다. 6·3 대선 이후에도 유예의 시간이 한 달간 더 주어진다. 이에 선거운동 기

간 각 후보들은 나름의 해법을 공약에서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들의 존망이 걸린 워싱턴발 무역전쟁이 국내에선 표를 얻기 위한 정무적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일단 6월3일 이전까지의 '1단계' 협상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하에서 양국의 통상당국이 움직인다. 관세 25%를 막기 위해선 백악관이 원하는 바를 내줘야 할 처지다. 통상 현안뿐 아니라 국방 등의 여타 부문 요구가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수 있다. 이 경우 2개월 뒤 물러날 한 대행의 임의적 결정이 가능할지도 관건이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 ▲현재 '尹파면' 여론조사, 수용 74%·불수용 23%
- ▲한미 해군, '전·평시 조난상황 대비' 연합 구조 작전 훈련 실시 /사진 뉴시스

- ▲"美 상호관세 유예에도 불확실성 여전"... 범정부 TF 가동
- ▲감사원, 새만금 잼버리 '총체적 부실'... 6건 징계·23건 주의

- ▲통일부,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확정... 3개 권역 중장기 발전 추진
- ▲홍준표, 대구시장 퇴임 연설... "30년 정치 인생 마지막 걸겠다"